
2023년 정부혁신 종합계획

2023. 3.

관계부처 합동

목 차

I. 추진배경	1
II. 추진방향	5
III. 중점과제	6
《모두가 편한 서비스 정부》	
1. 국민 일상이 편해집니다.	6
2. 기업 경제활동이 쉬워집니다.	11
3. 사회 안전을 든든히 지킵니다.	14
《데이터 기반의 애자일 정부》	
4. 과학적 근거로 정책의 질을 높입니다.	17
5. 유연하고 민첩하게 일합니다.	19
6. 성과 중심의 공직문화를 구현합니다.	23
《소통·협력하는 선제적 정부》	
7. 사회문제를 예견하고 대비합니다.	26
8. 상호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합니다.	28
9. 국민과 소통하며 정책을 만듭니다.	31
IV. 추진체계 및 성과관리	32
V. 추진일정	34
참고1: 과제별 소관부처 및 추진일정	35
참고2: 역대 정부혁신 추진내용 및 추진체계	39
참고3: 정부혁신 관련 국제기구 평가지표	40

추진 경과

□ 정부혁신 관련 대국민 의견수렴 및 분석: '22.7월 ~ 10월 초

- 정부혁신 가치·비전·미션·목표 설정 및 주요과제 발굴을 위해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 진행 ('22.7월~9월, 2회 실시, 약 8,400명 참여)
- 어르신·장애인·외국인·맞벌이직장인·공무원 등 분야별 '정책고객과의 대화'로 행정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개선방안 논의 ('22.9월~10월, 6회 실시)

□ 「정부혁신 추진방향」 수립·보고: '22.10.11.

-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혁신 추진방향」을 차관 회의('22.10.6.) 및 국무회의('22.10.11.) 보고
※ (가치)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 / (비전)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

□ 국민이 바라는 정부혁신 과제 발굴: '22.12월 ~ '23.2월

-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22.12월~'23.1월) 분석결과를 종합계획에 반영
※ 정부혁신으로 개선해야 할 분야, 정부혁신 발전방향, 주요과제 추진 필요성 등
- 정부혁신 추진방향에 부합하도록 전 부처가 혁신과제 발굴(~'23.2월)

□ 범정부 혁신 추진체계 운영: '23.1월~

-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부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전체회의(1.13.), 제1차 토론회(2.16.) 및 제2차 토론회(3.16.) 개최하여 2023년 정부혁신 추진방향 및 중점과제 등 논의
*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내 특별위원회

□ 윤석열 정부의 '정부혁신' 필요성 강조: '23.2.7.

- 행정안전부 업무보고(1.27.) 및 국무회의(2.7.) 대통령 모두말씀을 통해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 구현, 형식주의 타파, 성과주의 확산, 서비스 혁신 등 강조

□ 「2023년 정부혁신 종합계획(안)」 마련: '23.3월 초

- 정부혁신 추진방향('22.10.11.)의 가치·비전·미션·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2023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3대 전략과 9대 중점과제 마련
※ 3대 전략, 9대 중점과제, 102개 세부과제 선정 (38개 중앙행정기관 참여)
- 「정부혁신 전략회의(4~5월 개최 검토중)*」에서 '애자일 정부 구현 방향'을 공유하고, 민간전문가와 함께 토론하여 범정부적인 혁신 공감대 확산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전문가, 혁신기업 등 참여

I. 추진배경

1 국내·외 정책환경

□ 정치적 환경: 지방시대 본격화 및 시민의식 향상

- 자치분권의 확대로 지방소멸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과의 적극적 협력 필요성 증대
- 시민의식 향상으로 정책 집행·결정 과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정책에 대한 투명성 강화 및 대국민 소통에 대한 요구 증가

□ 경제적 환경: 글로벌 경기 침체 등 경제위기 지속

-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고물가·고금리 지속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 가중 및 경제적 양극화 심화
- 글로벌경제의 경쟁심화와 불확실성 증대로 경제위기의 상시화

□ 사회적 환경: 안전한 삶에 대한 관심 증가와 인구의 다양성 증대

- 기후변화 가속화로 자연재난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사회 복잡성 증가에 따른 신종 사회재난이 발생하면서 안전에 대한 관심 급증
-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및 귀화, 외국인 유입 확대 등으로 국내 거주 인구의 인적 구성 다양성 증대

□ 기술적 환경: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

- ChatGPT* 등 방대한 정보(문자·영상 등)를 학습하여 추론하고 새로운 정보를 생성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

* 딥러닝을 통해 스스로 학습하고 자연어를 기반으로 인간과 소통하는 대화형 AI 챗봇으로 소설·시·음악 등을 창작하고 프로그램 코딩 등 다양한 과제 수행 가능

- 디지털에 기반한 업무처리에 따른 데이터의 축적과 분석기술의 발전으로 과학적 의사결정 지원이 가능

2 정부혁신 필요성

□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과 정부혁신

- 정부는 문제를 잘 해결하는 일 잘하는 정부*를 지향하며, 국정 기준을 국민에 두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

* 【국정목표 1】 약속 ③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 국민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는 먼저 발굴하여 제공하고, 공직 내 형식주의를 타파하여 민첩하고 유연하게 일하는 정부 구현 추진

※ 3+1 개혁(노동·교육·연금 개혁 + 정부혁신)으로 설정하여 중점적으로 추진

< 대통령 주요말씀 >

'23.1.27. 행안부 업무보고	■ 정부는 행정서비스를 최고 수준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창출하는 데에 집중해야 합니다.
'23.2.7. 국무회의	■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합니다. ■ 기존 관행의 틀을 과감하게 깨야 합니다. ■ 공직자의 일하는 방식과 생각이 변해야 합니다.

□ 국민이 바라는 정부혁신

- 국민도 정부가 국민과 투명하게 소통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며, 공공서비스 및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
- 또한,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해 정부가 민첩하게 대응하고, 정부·민간·지역사회간 협력하는 것이 정부혁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식

< 정부혁신 인식조사 주요 결과 (온라인 조사, 2천 명 응답, 2023년 1월) >

■ 정부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						
19%	18%	16%	13%	11%	10%	15%
공개·개방	안전관리	서비스	공직문화	포용	참여	기타
■ 발전적이고 지속가능한 정부혁신을 위해 필요한 사항						
27%	25%	17%	16%	15%		
소통·참여	민첩한 대응	상호협력	혁신 의지	필요성 인식		



국민이 체감하는 확실한 변화를 위해 문제를 효과적으로 빠르게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는 범정부 혁신이 필요함

3 정부혁신이 나아갈 길

〈 행정(정책) 단계별 혁신의 방향 〉

행정 단계	현황 진단	개선방향	전략
정책과제 발굴·대응	▶ 국가적 위기징후에 대한 사전적 관리체계 부족으로 대규모 피해 발생	▶ 국민과 소통하며 과제 발굴 ▶ 예측에 기반한 선제적 대응	선제적 정부
정책 결정, 조직 운영	▶ 정부 내 조직관리의 경직성, 관행·관습 등으로 빠른 의사 결정과 대처에 한계 존재	▶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 민첩하고 유연한 조직 운영	애자일 정부
문제 해결,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이용 절차가 어렵고 복잡하여 국민과 기업에게 큰 부담	▶ 한 곳으로 통합된 서비스 ▶ 쉽고 빠른 원스톱 서비스	서비스 정부

□ 국민과 소통하고 중앙·지방·민간이 협력하여 선제적으로 문제 대응

- 국민과의 소통에 기반하여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중앙 부처·지자체·기업이 협력하여 사회문제를 예견하여 선제적으로 대비

➔ 국민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문제에 미리 대비하는 **선제적 정부**

□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빠르고 효과적으로 정책 결정

-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정책결정으로 정책의 품질을 제고하고, 사회문제에 유연하고 민첩하게 대응하는 애자일(Agile) 정부 구현

➔ 데이터를 활용하여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애자일 정부**

□ 모든 사회구성원이 편한 세계 최고 수준의 공공서비스 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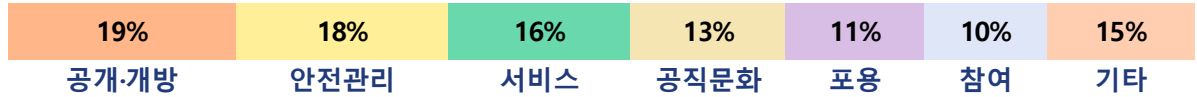
- 누구나 간편하고 안전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우리나라 행정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혁신

➔ 모두가 편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 **서비스 정부**

【참고】 정부혁신 인식조사 분석결과

(온라인 조사, 2천 명 응답, 2023년 1월)

■ 정부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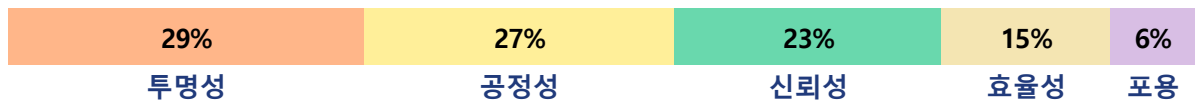
- 19 % 투명한 정보공개·데이터 개방을 통한 알권리 보장 공개·개방
- 18 %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안전관리
- 16 % 대국민 공공서비스 개선을 통한 국민편의 증진 서비스
- 13 % 공직사회 조직문화 및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 개선 공직문화
- 11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공공성 강화 포용
- 10 % 정책추진과정에 실질적 국민참여 확대 참여
- 8 % 인공지능·빅데이터기반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디지털
- 7 % 정부혁신 성과의 국제적 확산 강화 국제적 확산

■ 발전적이고 지속가능한 정부혁신을 위해 필요한 사항



- 27 % 활발한 대국민 소통 및 쉽고 효능감 있는 국민 참여 소통·참여
- 25 %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한 정부의 민첩한 대응력 민첩한 대응
- 17 % 정부·민간·지역사회간 상호협력 상호협력
- 16 % 정부·공공기관 기관장의 혁신의지 혁신 의지
- 15 % 공무원의 정부혁신 필요성 인식 필요성 인식

■ '정부혁신'으로 추구해야 할 최우선 가치



■ 미래사회 대비 공무원 역량강화가 필요한 분야



⇒ 시사점

- 정부는 국민과 투명하게 소통하고, 대국민 공공서비스를 개선해야 하며 문제를 민첩·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혁신을 추진해야 함

Ⅱ. 추진방향

가치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

비전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

미션

국민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행정의 국제경쟁력을 높인다.

목표

OECD 평가 '정부신뢰도' 10위권 진입 20위/ 37개국 (2021)
세계은행 평가 '정부효율성' 10위권 진입 20위/209개국 (2022)



전략과 중점과제

모두가 편한
서비스 정부

1. 국민 일상이 편해집니다.
2. 기업 경제활동이 쉬워집니다.
3. 사회 안전을 든든히 지킵니다.

데이터 기반의
애자일 정부

4. 과학적 근거로 정책의 질을 높입니다.
5. 유연하고 민첩하게 일합니다.
6. 성과 중심의 공직문화를 구현합니다.

소통·협력하는
선제적 정부

7. 사회문제를 예견하고 대비합니다.
8. 상호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합니다.
9. 국민과 소통하며 정책을 만듭니다.

Ⅲ. 중점과제

모두가 편한 서비스 정부

1 국민 일상이 편해집니다.

◆ 누구나 동등하게 / 사회적 약자 보호 / 쉽고 편리하게 / 더욱 빠르게

□ 누구나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구현

- **(유니버설 디자인)** 장애인·고령자·외국인 등 모든 사회구성원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을 공공서비스에 전면 적용

* 장애·나이·국적 등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에 제약받지 않도록 설계한 보편적인 디자인

※ ('23.3월~) 관계기관·전문가 등과 추진방안 논의 → ('23.4월~) 제도 정비 및 지자체 확산

<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예시 >

		
▶ 휠체어 및 유모차 사용자가 공공시설에 설치된 경사로를 통해 출입	▶ 고령자와 저시력자가 공공 웹.앱을 큰글씨로 표시 설정하여 이용	▶ 다문화가정과 외국인주민이 주요 행정·민원서비스를 다국어로 이용

- **(신원확인)** 공공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없도록 신원확인 제도 개선
 - 재외국민, 귀화자, 국내 거주 외국인 등 누구나 본인확인에 불편*이 없도록 국가신분증의 기재정보, 표기방식 등에 대한 표준 마련·확산

* 정부가 발급·운영 중인 신분증별 기재정보 표기방식, 유효기간 유무, 사용처 범위 등이 다름

※ ('23.3월~) 관계기관·전문가 등과 개선방안 논의 → ('23.4월~) 제도 정비 및 표준 제정

< 국가신분증 개선 검토사항(안) >

- ▶ **(성명 표기방식)** 표기 가능한 성명의 최대 글자 수가 신분증별로 다르고, 성명이 긴 일부 내국인·외국인은 신분증에 성명 일부만 표기되어 신원확인 불가능
- ▶ **(신분증 유효기간)** 일부 신분증에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아 발급된 지 20년 넘은 신분증도 쓰이고 있어 사진으로 개인을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 존재

- 재외국민도 온라인으로 본인확인*을 하고, 국내와 동일한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영사민원서비스' 구현

* 휴대전화없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여권, 재외국민등록부 등 해외체류정보 활용

** 산재한 영사업무 홈페이지를 통합하고,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 민원 대폭 확대

※ ('23.7월~) 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 구축 추진 → ('24.1월) 서비스 개시 및 확대

〈 디지털 영사민원서비스로 달라지는 점 〉



□ 장애인·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복지서비스 강화

- **(장애인)**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권역별로 설치·운영하고, 비급여 진료비 일부를 감면하는 등 장애인 치과진료 접근성 향상

※ (~'23.6월) 「구강보건법」 개정 → (~'24.12월) 권역센터 미설치지역(서울·세종)에 확충

-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백신*을 국가예방접종에 도입하여 영유아 예방접종률을 제고하고, 영유아 부모의 접종 비용 경감

* 로타바이러스 백신을 도입하면 5세 미만 영유아의 로타바이러스 장염 발생률은 48.9% 감소하고, 치료비용은 약 303억 원(57.9%) 감소하는 예방접종 효과 발생

※ (~'23.2월) 고시 개정 및 백신 조달 계약 → ('23.3월~) 로타바이러스 국가예방접종 시행

- **(결식우려아동)** 아동급식카드를 배달앱과 연계하고, 온라인으로도 급식을 주문·결제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결식우려아동 지원 강화

※ ('23.4월) 사업추진 지자체 선정 → ('23.9월~) 시스템 구축 및 부가서비스 개발

- **(소아·청소년)** 희귀질환 진단지원 확대*, 고위험군 가족검사 등 조기 개입으로 예후를 개선하고, 사각지대 의료비** 부담 경감

* 대상질환: 극희귀질환 (280개) → 모든 희귀질환 (1,165개, 비유전성 및 급여검사 대상 제외)
지원범위: 희귀질환자 → 희귀질환자 및 부모·형제 (3인까지)

** 기존 의료비 지원의 사각지대였던 산정특례 적용 이전 발생하는 진단비용

※ (~'23.3월) 지원사업 운영방안 마련 및 수행기관 선정 → ('23.4월~) 희귀질환 진단지원

- **(독거노인)**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집을 수리하고, 주택용 소방 시설을 설치하는 등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 소방청·서(총괄),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지원), 포스코건설(사업비용 부담) 등 참여

※ ('23.3월) 사업계획 수립 → ('23.5월~) 지원대상 선정 및 사업추진(325가구)

□ 한 번의 신청으로 완결되는 더욱 빠른 서비스 제공

- **(원스톱서비스)** 한 번의 신청만으로 서비스 제공이 완결

- 여행자 휴대품을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하고, 제세 부과·납부 까지 자동세액계산 알고리즘을 통해 한 번에 처리

* 모바일 자진신고자는 세관절차 없이 신속하게 통관하고, 간편하게 세금을 납부

※ (~'23.6월) 자동 세액부과·사후납부 기능 개발 → ('23.7월~) 서비스 개시

< 휴대품 모바일신고 절차 >

					
기본정보 자동입력	과세 물품 신고서 작성	QR코드 생성	심사대 인증	휴대품 확인 생략	신속통과 및 사후납부

- 고령자·중증장애인 등이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에 1회만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될 경우 자동 신청 처리

*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

※ (~'23.2월) 기능 개발 → (~'23.5월) 대상자가 자동신청에 동의 → ('23.9월) 국세청이 일괄 자동신청

<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개요 >



- **(신속처리)** 신체검사 대체, 의료정보 공유 등으로 행정 처리기간 단축
 - '보훈심사 신속처리제*'와 '국가보훈 장애인단서**'를 도입하여 보훈심사와 상이등급 판정을 신속하게 처리
 - * 군인·경찰·소방관(전역·퇴직 6개월 전 및 최근 1년 이내 사고) 대상 보훈심사 소요기간을 기존 8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
 - **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대체하여 소요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 ※ ('23.2월) 보훈심사 신속처리 전담팀 신설 → ('23.6월) 국가보훈 장애인단서 도입
- 의료정보 공유로 병역판정을 위한 제출서류(진단서, 수술기록지 등)를 감축하여 병역의무자의 병원 방문 시간·비용 절감*
 - * 서류발급·제출 등을 포함한 병역판정까지 평균 소요일수가 25일에서 3일로 단축
- ※ ('23.1월~) 병무청 지정병원 의료정보 공유시스템 안내 및 참여 홍보

□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

- **(민원 간소화)** 유사 민원 통·폐합, 구비서류 감축, 온라인 처리 확대 지원 등 민원 간소화*로 국민의 민원 처리 편의성 개선
 - * 각 부처는 민원 간소화 방안을 수립하고, 행안부는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권고
- ※ ('23.3월) 범정부 민원 일제정비 추진계획 수립 → ('23.10월) 추진결과 분석·보고
- **(창구 일원화)** 특정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분산된 서비스를 하나의 창구로 일원화하여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 초등 돌봄 신청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온종일돌봄원스톱서비스' (정부24)에 영유아 돌봄 플랫폼**을 연계하여 통합서비스 제공

* 초등돌봄교실(교육부), 학교돌봄터(복지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여가부), 돌봄시설(지자체)

** 아이돌봄(여가부), 어린이집 입소 '아이사랑'(복지부), 유치원 입학관리 '처음학교로'(교육부)

※ (~'23.12월) 정부24와 영유아 돌봄서비스 연계 → ('24.1월~) 통합서비스 개시

- 분산된 고용서비스*를 한 곳에서 조회·신청하고, 개인·기업 특성에 따른 맞춤형 추천서비스 제공하는 플랫폼** 구축

* 워크넷(취업지원), 고용보험(실업급여), HRD-NET(직업훈련) 등 9개 서비스

** 공공·민간기관과 정보 연계하여 사업자등록증 등 각종 증빙서류 제출 간소화

※ ('22년~) 고용24 구축 추진 → ('23.5월) UI·UX 설계 확정 → ('24.1월) 서비스 개시

- 기관별 행정심판 기능을 통합*하여 한 곳에서 청구, 진행상황 확인, 사건처리 등을 할 수 있도록 '원스톱 행정심판' 구현

* 각 특별심판기관의 의사결정구조, 사건처리인력운용 현황, 통합 장·단점 분석 후 통합방안 마련

※ (~'23.12월) 통합방안 및 「행정심판법」 개정안 마련 → (~'25년) 전체 심판기관(123개) 시스템 통합

- 개인정보침해신고, 분쟁조정 신청, 개인정보 열람요구 등 유사·중복 홈페이지를 통합하여 개인정보 관련 서비스 단일 창구 운영

※ (~'23.3월) 개인정보 포털 서비스 개시

○ (이용환경) 국민의 관점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용환경 제공

- 홈택스 초기화면 메뉴 구조와 이용방법, 세무용어 등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비대면 세정서비스* 확대

* 사업자등록 취하서,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변경 등을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처리

※ ('23.1월~) '사용자 중심 홈택스 개편 TF' 구성·운영하여 홈택스 개선과제 271건 추진

- 법령정보를 일상용어나 문장으로 질문하여 쉽게 검색하고, 법령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시각 콘텐츠(그림, 사진 등)로 제공

※ ('23.1월~) 지능형 법령정보 검색서비스 설계·개발 → ('23.4월~) 시각 콘텐츠 개발

2 기업 경제활동이 쉬워집니다.

◆ 경제활동 지원 / 행정부담 완화 / 신산업 육성 및 활성화

□ 기업 경제활동 맞춤형 지원 및 신속한 처리로 행정 부담 완화

- **(사업안내)** 경제활동에 필요한 지원사업 등의 정보를 맞춤형으로 추천·안내하여 기업의 정보 탐색비용 절감

- 선제적·맞춤형으로 농림사업을 안내받고, 증빙서류없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는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단계별 구축 주요내용: (1단계) 대민서비스를 비대면으로 제공 → (2단계) 수급자격 자동판정 등 농업행정 효율화 → (3단계) 부정수급 예방 등을 위한 데이터분석체계 마련

※ (~'23.6월)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수립 → (~'25년) 시스템 구축

〈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으로 달라지는 점 〉



- 기업정보, 공고정보, 행위기반 이력 데이터*를 분석·매핑하여 해당 기업에 필요한 지원사업들을 실시간으로 맞춤형 추천

* 관심공고 클릭, 추천공고 만족도, 공고탐색, 스크랩 등

※ (~'23.5월) 지원사업 공고 맞춤형 추천 서비스 개발 → (~'23.6월) 서비스 개통

- **(신속처리)** 각종 서류 심사의 간소화·자동화를 통해 계약 소요기간, 제품 심사기간 등을 대폭 단축하여 기업의 행정적 부담 완화

- 기업이 무역금융을 신속·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업의 동의를 받아 통관데이터를 은행 등 수요기관에 직접 제공*

* '기업 마이데이터 종합관리 플랫폼'으로 다양한 수요기관에 통관데이터 전송

※ ('23.4월~) 플랫폼 구축 및 무역금융 수출증빙 전용 서비스 개시

- 식품 관련 수입신고 서류검토업무를 '전자심사24'를 통해 자동화하고, 디지털심사 방식으로 전환하여 처리속도* 향상

* 365일·24시간 신고 가능하고, 5분 이내 처리(기존에는 평일만 가능하고, 처리기간 1일 소요)

※ (~'23년) 식품첨가물 및 농·축·수산물 → (~'24년) 가공·건강기능식품 → (~'25년) 기구·용기 등

- 신약 관련 혁신기술 적용 제품의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구축

* GIFT(Global Innovative products on Fast Track)로 심사기간을 120일에서 90일로 단축

※ ('23.1월~) GIFT 지정품목 개발사와 협의체 운영 → (~'23.8월) GIFT 안내페이지 개설

- 특허넷과 연계하여 심판서류*를 자동으로 작성하고, 대용량 동영상 증거를 온라인 제출하는 등 특허심판 절차를 쉽고 빠르게 개선

* 피청구인 정보, 권리자 정보, 등록공고일, 결정등본수령일자, 심판번호 등

※ ('23.4월~)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 개발 추진 → ('24.1월) 서비스 개시

- (기술 지원) 데이터 기반의 상품 대량거래체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기술 지원

- 유통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전국 단위의 '온라인거래소' 출범

* 농산물 산지에서 소비지까지의 각종 유통데이터를 수집·분석·제공하여 거래자의 출하·구매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선별·포장·물류 과정을 자동화한 농산물 상품화 시설

※ ('23.12월) 온라인거래소 출범 → (~'27년) 스마트 산지유통센터 100개소 단계적 구축

- 제조·유통·물류 분야의 상품·거래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이 신규 제품·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

* 특정상품군의 월간 인기상품, 매장 상품구성 추천, 특정 업체별 소비자 구매정보 등

※ (~'23.6월) 상품정보 DB 구축 및 데이터 수집·분석 → (~'23.12월) 매출·가격 예측서비스 제공

□ 기술환경 변화를 고려한 신산업 육성 및 활성화 기반 조성

- (신산업 육성) 디지털 기술 활용한 주소·위치기반 산업 등 신산업 육성

- 입체주소체계* 도입 및 데이터 통합관리로 주소기반 산업 육성 지원

* '26년까지 지하·고가·내부도로 64만 개, 사물·공터 1,400만 개 주소 도입 예정

※ ('23.4월~) '디지털 주소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추진 → (~'23.12월) 플랫폼 구축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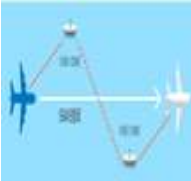
- 정밀한 위치정보*(항공·육상·해상)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위치기반 산업** 활성화 지원

*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인 KASS(Korea Augmentation Satellite System) 신호를 통해 GPS의 위치오차(기존 15~33m)를 1~1.6m로 보정하여 신뢰도 높은 위치정보 제공

** 도심항공교통, 드론, 자율주행차, 내비게이션, 주차, 택시, 대리기사 호출 등

※ ('22.12월) KASS 신호 시험 제공 및 안정화 → ('23.6월) KASS 신호 본격 제공

< 주소·위치정보 활용 분야 >

					
항공로	자율주행	드론 비행	내비게이션	대중교통	실종자 위치

- **(판로지원)** 우수기술 보유 업체 대상으로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 방산 수출 호조세에 따라 맞춤형 컨설팅 및 수출 제반사항 지원을 강화하여 방위산업 육성·수출 활성화*

* 방산기업원스톱지원센터,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이 협력하여 현장 밀착형으로 지원

※ ('23.3월~) 맞춤형 컨설팅 → (~'23.12월)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지원

- 소방산업의 해외판로개척을 위해 해외인증 취득, 특허출원, 해외 수출 마케팅*, 맞춤형 컨설팅 등 지원 강화

* 온라인으로 '소방특별관' 운영하여 외국 바이어와 직접 연결하여 수출 지원

※ ('23.1월~) 소방특별관 운영 → ('23.10월~) 해외인증 취득 등 지원

- 다수의 특허권자로 구성된 신산업 기술제품도 혁신제품으로 지정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공공판로 지원

※ ('23.2월) 「혁신제품 구매 운영규정」 개정 → (~'23.12월) 신산업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

< 자율주행차의 혁신제품 지정 예시 >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 자율주행차의 경우, 차량 플랫폼, 장애물 감지 센서, 주행 지도 등이 다수 기업의 개별 특허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행 규정으로는 혁신제품 지정신청이 불가	 여러 회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혁신제품 지정

3 사회 안전을 든든히 지킵니다.

◆ 위기징후 예측 및 선제적 대응 / 안전 관리체계 개선 / 안전 인프라 강화

□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국가안전관리 체계 강화

- **(방역)** 검역부터 감염병 신고, 병원체, 역학조사 등 감염병 대응 전 과정의 시스템을 통합·연계*하여 개인별 이력관리 체계 구축
 - * 감염병 데이터 개방제도 수립, 감염병 수집 정보 표준화·모듈화, 외부기관 정보 연계 등
 - ※ ('23.3월) 감염병 데이터 개방제도·절차 수립 → (~'23.12월)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에 대비하여 방사능 감시망*을 강화하고, 수산물 중점관리품목**을 선정하여 방사능 검사 확대
 - * 연안 감시 정점 확대(45→52개), 해양조사선상 방사능 신속 분석기술 적용 모니터링 등
 - ** 방사능 검출 이력 품종, 회유성 어종, 다생산·다소비 품종 등
 - ※ ('23.2월~) 해양방사능 분석 → (~'23.12월) 국민우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전수조사(연 2회)
- **(식품)** 식품제조공정 중 위해요소를 자동으로 기록·관리하여 식품 위생사고를 예방하는 '스마트 HACCP*' 선도모델 개발
 - * 식품제조공정 자동화·디지털화로 수집·분석된 데이터를 토대로 원인과 해결책을 스스로 판단하고, 실시간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 시스템
 - ※ (~'23.12월) 선도모델(김치류) 및 데이터 수집용 스마트 센서(소독·형균 등 5종) 개발

〈 스마트 HACCP 시스템 기능 〉



- **(의약품)**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상황별 의료제품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국가필수의약품 등 원활한 공급** 지원
 - * 공급 시급성, 사전 비축 필요성,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 대체의약품 유무 등 고려
 - ※ ('23.12월) 의료제품 관리방안 마련 → ('25년) 위기대응 의료제품 정보시스템 구축
- **(폐기물)** 폐기물 배출·운반·처리 전 과정의 **현장데이터***를 분석·활용하여 운반경로, 불법투기 등 **이상행위를 탐지**하고 **즉시 대응**
 - * 폐기물 처리량, 운반차량 위치정보(GPS), 계량·보관시설 CCTV 영상정보 등
 - ※ ('22.10월) 건설폐기물 → ('23.10월) 지정폐기물 → ('24.10월) 사업장일반폐기물

□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 인프라 구축

- **(사고예방)**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육·해상 교통 안전성 향상
 - 보행안전을 위한 신호등, 횡단보도 등 교차로 안전시설에 AI와 ICT를 적용한 **표준모델***을 제작하여 지자체로 확산
 - ※ ('23.2월~) 첨단교차로 표준모델 배포 → (~'23.12월) 지자체로 설치 확대
- 〈 표준모델 예시 〉

 - ▶ **(스마트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활주로형 표지병, 투광기 등 횡단보도 내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보조장치를 통합 설치
 - ▶ **(차량·보행자 위험안내)** 차량과 보행자 간의 상호 접근을 감지하여 접근정보를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스피커, LED전광판 등으로 표출
 - ▶ **(보행신호 자동연장)** 보행신호시간 내 횡단을 완료하지 못한 횡단보도 내 보행자를 감지하여 보행신호를 자동으로 연장 (최대 10초)
- 전국 해상교통관제시설에서 수집한 각종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빅데이터 기반 관제지원 기술*로 해상교통 사고 예방
 - * 혼잡시간대 예측, 주의선박 식별, 정박 대기시간 예측 등 관제사의 신속한 상황인지 지원
 - ※ ('23.10월) '선박교통관제(VTS) 로드맵' 수립 → ('23.12월) 통합플랫폼 구축
 - **(구조활동)** 신호제어 등을 통해 신속한 현장 출동 및 구조활동 지원
 - 긴급차량의 이동경로에 따라 교차로 신호를 일시적으로 제어하는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
 - * 지자체별 도로 여건 고려하여 현장제어방식(긴급차량과 교차로에 설치한 통신장비로 우선신호 자동부여) 또는 중앙제어방식(교통관제센터에서 무전으로 우선신호 부여) 적용
 - ※ ('23.1월~) 서울·대구·전북·전남 등 미설치 지역 중심으로 설치 확대

< 현장제어방식의 우선신호 예시 >



- 각 기관의 CCTV를 연계한 스마트 CCTV*로 재난현장상황과 출동 경로상 장애요인 정보를 공유하여 신속·정확한 현장활동 지원

* 모바일로도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현장 대응 신속성 강화

※ (~'23.12월) 「소방기본법」 개정, 유관기관 CCTV 통합연계, 모바일 기능 개선 등

< 스마트 CCTV 활용 예시 >



- **(자원관리)** 재난관리자원*의 공급·재고·사용 현황 등을 실시간 관리** 하여 재난 발생시 신속·효율적인 자원공급체계 가동

* 장비(발전기·양수기 등), 자재(시멘트·철근 등), 물자(방호복·염화칼슘 등) 등 재난관리물품 및 시설

** 국토부, 경찰청 등 12개 기관 42개 시스템의 데이터 수집·연계

※ (~'23.11월) 「재난관리자원법」 및 하위법령 제정 → (~'23.12월) 시스템 고도화

데이터 기반의 애자일 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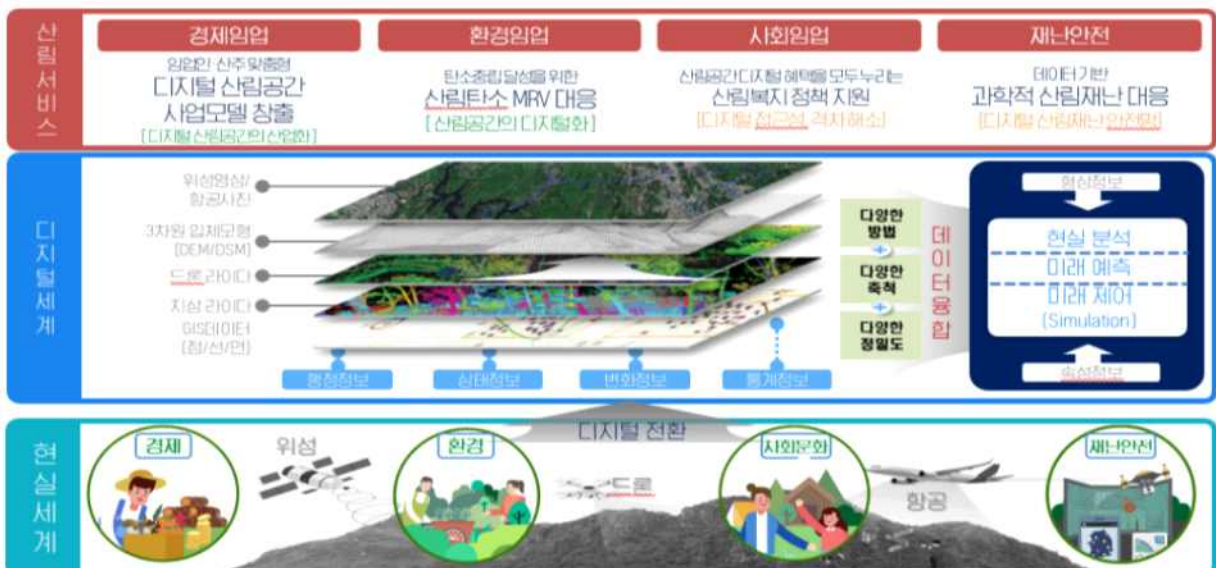
4 과학적 근거로 정책의 질을 높입니다.

◆ 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품질 향상 / 데이터 분석·활용 지원

□ 데이터를 활용하여 행정 및 서비스 품질 향상

- **(국세)** 데이터 큐레이션*(data curation), 컨설팅, 맞춤형 분석지원 및 소득세 표본자료 공개 등으로 국세 데이터 활용성 강화
 - * 데이터를 목적에 따라 분류하여 필요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 및 기술
 - ※ ('23.11월) 소득세 표본자료 공개 → (~'23.12월) 국세데이터 큐레이션·컨설팅 등 지원
- **(조달)** 분산된 조달데이터 창구를 통합하여 조달통계*의 일관성·정합성을 확보하고, 데이터 기반의 예측**·추천 분석모델 개발
 - * 핵심통계 위주로 간소화하고, 통계데이터를 분석·시각화할 수 있는 도구 제공
 - ** 물품·지역·계약방법 등 공공조달 규모, 시간대별 입찰혼잡도 등 예측
 - ※ (~'23.12월) 차세대 '나라장터' 개발 및 테스트 → (~'24.6월) 서비스 개시
- **(산림)** '산림공간 디지털 플랫폼*' 구축 및 시·공간 산림데이터 융복합으로 산림부문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과학적으로 산림경영
 - * 실제 산림을 가상공간에 디지털 복제하여 현재의 산림을 분석하고, 미래산림을 예측하여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이터 기반 산림서비스 플랫폼
 - ※ ('23.2월) 「산림공간 디지털 플랫폼 추진계획('23~'27)」 수립 → ('23.11월) 플랫폼 구축·운영

< 산림공간 디지털 플랫폼 개요도 >



- **(기상)** 데이터허브*에서 데이터·그래픽을 API방식으로 통합제공하고, 활용수요가 높은 기상기후데이터의 융합·분석 지원** 강화

* 전세계 기상기후데이터(페타바이트급)를 활용하여 국가·사회의 기상기후 의사결정 지원

** 농업, 에너지, 교통 분야 격자데이터 및 실시간 기상관측·기후통계 데이터 등

※ ('23.7월) API 통합서비스 제공 → ('23.12월) 기상기후 데이터허브(분석플랫폼) 운영

〈 기상기후데이터허브 주요 기능 〉



- **(해양)** 해양의 시설물, 취락지 등 공간데이터*를 지도기반으로 공유하고, 해양안전데이터를 활용하여 치안서비스 품질 향상

* 상황처리·구조활동 전개시 주의가 필요한 해역·지형·시설 특성을 고려한 데이터

※ (~'23.9월) 해양안전데이터 개방 및 API 제공 → (~'23.12월) 공간데이터 공유·활용 지원

□ 과학적 정책결정을 위한 데이터 분석·활용 지원

- **(기술지원)** 사회문제 발굴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분석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분석시스템·모델 개발 등 지원

- 기관협력과제·수요기반과제·상시이슈 등을 유형별로 심층 분석* 하고, 최적의 정책대안을 빠르게 결정하도록 지원

* 예) 보이스피싱범 검거활용 음성분석, 생활 속 규제·불합리한 법령 발굴 등

※ ('23.1월~) 분석 수요조사 → ('23.3월~) 상시 데이터 분석·기술지원 → ('23.7월~) 분석수행

- 중앙·지자체·공공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시스템·모델을 구축하여 사용자 맞춤형 분석환경 제공 및 AI 기반 서비스* 제공

* 이미지·영상·음성 데이터의 텍스트 추출, 객체 인식(판별) 등

※ ('23.1월~) 표준분석모델 제공 및 개발 확대 → ('23.3월~) 분석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 정부조직을 유연하게 운영 / 공직 내 형식주의 타파 / 긴급현안 신속 대응

□ 정부조직을 유연하게 운영하여 효율성 제고

- **(조직 재구조화)** 조직진단을 통한 통합활용정원* 운영으로 불필요 분야를 과감히 감축하고, 부처 내·부처 간 재배치·재구조화 추진

- 정부 인력을 증원 없이 감축 운영하는 기조를 유지하되, 국정성과 창출을 위해 필요한 분야는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기구·인력 보강**

* 5년간('22~'26) 매년 부처별 정원 1% 감축(총 5,500여 명) 및 범부처 공동으로 관리·활용

** 통상적인 기구·인력 지원을 넘어 현안 대응 등을 위해 필요시 즉각 보강할 수 있도록 연중 개정수요 모니터링 및 신속 지원

※ ('23.3월~) 정부조직 진단·컨설팅 → (~'23.4월) 통합활용정원 감축대상 지정 → (~'23.12월) 일괄 직제개정

- **(조직운영 특례)** 우주항공청 조직운영 특례(하부기구 구성*, 임기제공무원 비율** 관련) 시행 성과분석 후 확대 적용 검토

* 하부기구 구성: 연구개발사업 종류별·단계별 민첩한 추진을 위해 훈령을 통해 과 단위 기구(한시적 보조기구)를 설치·운영 가능

** 임기제공무원 비율: 전문가 채용 확대를 위해 보조·보좌기관 임기제 비율 상한(20%) 폐지

※ (~'23.12월) 연내 우주항공청 신설 추진

- **(조직 자율성 확대)** 국정과제 및 기관 역점사업 추진 등을 위해 기관장 책임하에 기구신설·인력증원 등 조직운영의 자율성 강화

- 자율기구제 적용 대상기관 확대 및 운영기간 연장 등 자율성 확대

* 대상기관: (현행) 중앙행정기관(47개) → (개선) 중앙행정기관과 이에 준하는 기관(52개)

운영기간: (현행) 1년(6개월+6개월) → (개선) 1년(6개월+6개월) + 협의 후 예외적 연장

※ ('23.3월) 2023년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반영

- 총액인건비 범위 내 직급조정 및 인력증원 비율 상향 (7% → 10%), 인력증원으로 한정된 일부 절감재원의 활용 확대

※ ('23.3월) 2023년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지침에 반영

- 직제 시행규칙이 없는 기관에 대해 조직관리 신속성·자율성 확보를 위해 직급별 정원 등을 훈령·예규 등으로 위임

※ (∼'23.4월) 대상기관 직제 개정 및 훈령·예규 마련 등 법령 정비

- (위원회 폐지·통합) 운영실적이 부진한 위원회는 과감히 폐지·통합* 하고, 불필요한 신설 및 부실 운영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 위원회 운영 필요시 목적·기능이 유사한 기존 위원회를 연계·활용하고, 불가피하게 신설하는 경우 존속기한 설정 및 운영활성화 여건 마련

* 「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안 및 위원회 정비를 위한 31개 일괄개정법률안 국회 계류 중(1개 통과)

※ (∼'23.6월) 「2023년 위원회 정비계획」 수립 → (∼'23.12월) 분기별 위원회 운영현황 조사·공개

- (공공기관 혁신) 공공기관 및 지방공공기관*의 효율성·생산성 제고를 위해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등에 대해 강도 높은 혁신 추진

- 기능조정, 경상경비 절감, 불요불급한 자산 정비 등 기관별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경영평가 및 정부업무평가에 반영

* 지방공공기관의 경우, 구조개혁 관련 반기별 이행실적 점검·평가 및 신규 과제 발굴, 부채중점관리기관 선정지표 개편 및 제도를 고도화하는 등 재무건전성 중점 강화

※ (∼'23.12월) 이행실적 점검 및 평가 등

□ 공공부문 내 형식주의를 타파하고, 민첩한 행정 구현

- (행정절차 재설계) 법제·조달 등의 내부 행정절차 중 기존의 관행·관습을 답습하고 있는 중복·비효율적인 절차는 과감하게 정비

- 법제처, 소관 부처,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TF*가 입안부터 공포까지 입법 전 과정을 원스톱 지원하여 법제심사 기간 대폭 단축**

* 필요시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이 완료된 시점에 차관·국무회의 즉시 상정 가능

** 규제심사(국조실), 부패영향평가(권익위), 개인정보침해요인평가(개인정보위) 등 관계부처 협조

※ ('23.3월∼) 분기별 원스톱 법제지원 → ('23.12월∼) 만족도 조사 및 개선

구분	입안 ▶	입법예고·평가 ▶	규제심사 ▶	법제심사 ▶	차관·국무회의
통상	30일	40일	40일	30일	10일
원스톱 법제지원	국정과제, 개혁과제 등 주요 정책 법령안의 법제 소요기간을 약 150일에서 50일로 대폭 단축 가능				

- 부서장이 전자문서를 대표로 검토하여 전자문서 기안부터 최종 결재까지의 과정(결재라인)을 최대 3단계*로 간소화**

* 예) 기존(7단계): 사무관 기안 → 팀장·과장·국장·실장·차관 검토 → 장관 결재

개선(3단계): 사무관 기안 → 과장 대표검토(팀장~차관 병렬공람) → 장관 결재

** 최종 결재권자까지 보고 완료한 경우, 전자문서 결재는 간소화하여 처리

※ ('23.3월~) 법령 개정안 검토 → (~'23.12월) 온나라문서관리시스템 개편

- **(업무 자동화)** 공무원이 수행하고 있는 내부행정상 공통업무 중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하여 행정 전반 혁신

- 법령안 작성 시 법령용어 적합성 검토, 표준 법령·조문 구성안 추천, 불공정·불합리한 법령 정비 등을 지원하는 자동화 시스템* 도입

* 예) 법령심사 의뢰안에 대한 반복적 오류 탐지, 참고 법령 및 조문 탐색, 유사 법령의 형식 등을 자동으로 파악하여 체계적인 입법 프로세스 지원

※ ('23.2월~) 시범모델 운영 → ('23.6월~) 시스템 구축 추진

- 다수공급자계약(MAS) 서류·절차 등을 간소화·자동화(50일 → 5일) 하고, 수요기관의 납품요구(연 137만 건)를 RPA로 자동 접수·처리*

* (기존) 담당자가 직접 처리(평균 8시간 소요) → (개선) 업무 자동화로 주문 즉시 처리

※ ('22.11월) '다수공급자계약 업무 자동화 시스템' 구축 → (~'23.12월) 적용대상 품명 100개로 확대

〈 MSC (MAS Smart Contract : MAS 자동화 시스템) 주요 기능 〉

- ▶ (데이터) 업체 정보 등 심사·계약 관련 정보를 데이터화하고, 데이터 간 연계
- ▶ (자동화) 단순·반복적인 업무에 자동화 처리 방식 적용하여 계약서 자동 작성
- ▶ (간소화) 정보 연계 등을 통해 불필요한 검토·승인 절차를 대폭 간소화

- **(업무환경)** 개인의 자율과 책임하에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조성하여 현장대응력 강화 등 신속한 업무 지원

- 사무실이 아닌 현장에서도 온북(2PC → 1노트북)과 스마트폰으로 문서결재, 자료확인 등을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업무환경* 구현

* 시간·장소에 제약없이 업무포털, 온나라 문서, G드라이브 등을 접속하여 업무처리

※ (~'24년) 온북 공통인프라(VPN, 방화벽 등) 구축 및 모바일 업무환경 전환 지원

- 원격근무의 시간·장소의 유연성을 높이고, 예측 불가능한 업무에 대한 재택 초과근무 명령 제도를 도입하여 현안에 민첩하게 대응

* 퇴근 후·주말 긴급 업무 발생 시 부서장이 '사전에 명령한 시간'만큼 수당으로 지급

※ ('23.1월~) 원격근무 장소·시간 유연화 시행 → (~'23.12월) 재택 초과근무 명령 제도 도입

< 원격근무 개선방안 >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시간 유연성	1일 단위에 한하여 신청	시간 단위(4시간 이상)로 신청
장소 유연성	자택·스마트워크센터	정책현장 등 추가, 재택 초과근무 가능

- 사전에 계획된 연가와 유연근무는 자기결재로 사용하도록 하여, 업무에 자율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근무 환경 조성

※ ('23.1월~) 자기결재 시범운영(행안부·인사처 등 4개 기관) → ('24년~) 성과분석 및 확대 검토

□ 원팀으로 긴급현안에 신속히 대응

- **(노동시장)**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을 위해 원하청 주도로 해법을 마련·이행하고, 중앙·지방정부는 인센티브 및 규제개선 발굴·지원

※ (~'23.6월) 조선업 상생협력 모델 구축 → ('23.7월~) 타 업종 확산으로 노동시장 전반 개선

- **(전세사기)**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피해자에게는 1%대 저리 자금대출 지원

* 주택임대차보호법(법무·국토부), 국세징수법(기재부), 지방세징수법(행안부) 등

** '안심전세 앱'으로 입주희망 주택의 적정시세, 악성임대인 명단 등 확인

※ (~'23.7월) '안심전세 앱' 구축·도입 및 자금대출 지원 → (~'23.12월) 관련 법령 개정

- **(마약차단)**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해 국가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검찰·경찰·관세청 등과 공조 네트워크 강화

* 미·중·일 해안경비대,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유엔마약위원회회의(UNCND), 북태평양 해양치안기관회의(NPCGF), 아시아태평양 마약법행기관회의(HONLEA) 등

※ ('23.3월) 마약수사 자문위원회 구성 및 유관기관 업무협약 → ('23.7월) UNODC 수사관 파견

- **(탄소중립)** 탄소 배출허용총량 강화, 배출권 위탁거래 도입, 탄소중립 설비 지원 등으로 기업의 탄소감축유인 제고

※ ('23.1월~)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추진 → (~'23.12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안)」 마련

◆ 공정하고 확실한 보상 실현 / 범정부적 인사운영 유연화

□ 공정하고 확실한 보상체계 확립

- **(연봉상한 폐지)** 우수 민간인재 유치가 필요한 분야*에 파격적 연봉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간의 공무원 연봉 책정 방식을 전면 개편

- 경력과 무관한 기준연봉 산정, 각 기관의 연봉 자율책정 상한 폐지 등 통해 민간 전문가의 임기 중 적정 처우 보장방안 모색

* 예) 우주항공청 소속 우주항공전문가, 국제통상 법률전문가, IT 전문가 등

※ ('23.4월~) 연봉특례 분야 조사 → (~'24.1월)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 및 규정 개정

< 전문분야 연봉 책정 방식 개편(안) >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기준연봉액	경력기간에 기초하여 산정 (예: 4급 10호봉)	기준연봉액 산정절차 폐지
연봉평가	직무, 능력, 인력수급 환경(민간 보수수준 등) 등 종합 고려하여 평가	
자율책정 연봉상한	기준연봉액 150% 이내 ※ 개방형 직위는 170% 이내	자율책정 연봉상한 폐지

- **(중요직무급)** 중요도와 난이도가 높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직무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우대방안 마련

- 중요직무급 대상을 단계적 확대하고, 수당 상한을 인상하는 등 핵심 직무가치에 따른 보상 강화

※ ('23.3월~) 세부 방안 검토 → (~'23.12월) 관계부처 협의 및 규정·지침 개정

- **(성과평가체계)** 성과평가 방식을 개선하여 공정한 평가체계 기반을 마련하고, 파격적 보상을 확대하여 성과주의 확산

- 일방적·하향식의 성과평가를 지양하고, 업무성과에 중점을 둔 공정한 평가를 위해 동료평가를 신설하는 등 성과평가체계 개선

※ ('23.6월) 동료평가 시범운영(인사처·소방청 등 4개 기관) 및 결과 분석 → ('24년~) 기관 확대

〈 동료평가 평가항목(예시) 〉

- ▶ (근무실적) 업무량, 업무 난이도, 목표 달성도, 종합성과, 부서성과 기여도 등
- ▶ (직무수행능력) 공감·소통, 열정·헌신, 창의·혁신, 윤리·책임 등
- ▶ (직무수행태도) 업무 협력, 조직 헌신성, 근무 성실성·적극성, 청렴도 등

- 전체 공무원에 대한 장기성과급을 신설*하여 지속적으로 탁월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우수공무원에 대한 동기부여 확대

* 3년 이상 최상위등급(S등급) 성과평가를 받는 공무원에 대한 추가 성과급 지급

※ ('23.6월) 장기성과자 현황 조사 → ('23.9월~) 운영방안 수립 → (~'24.1월) 규정·지침 개정

〈 장기성과급 신설에 따른 보상강화 효과(예시) 〉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S등급 657만원 (6급 예시)	장기성과자 986만원 (6급 예시)

- 우수한 실무직공무원에 대한 특별승급 요건을 완화(3년 → 1년)하여 탁월한 성과를 낸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보상 확대 방안 모색

※ ('23.4월~) 운영 현황 조사 → ('23.9월~) 운영방안 수립 → (~'24.1월) 규정·지침 개정

- **(속진임용)** 역량있는 실무직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승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 개선

- 공모직위 범위를 5급까지 확대하여 능력 있는 공무원은 최저승진 소요연수와 관계없이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속진임용제 본격 시행

※ ('23.4월~) 공모 직위 지정·선발, 제도홍보, 부처 선발지원 등

□ 범정부적 인사운영 유연화

- **(인사자율성 강화)** 각 부처의 민첩한 적재·적소·적시 인사 지원을 위한 제1차 인사 자율성 제고방안 정착·확산 및 제2차 과제발굴

- 「제1차 인사자율성 종합계획」에 따라 진행중인 47가지의 인사 시스템을 각 부처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 안내 및 전파

※ (~'23.8월) 2023 공무원 인사실무, 인사 운영 체크리스트 발간·배포

〈 제1차 인사자율성 종합계획 주요 내용 〉

- ▶ **(채용)** 5급 이하 경채 직위군 선발 근거 마련 및 선발 요건 자율설정 범위 확대
- ▶ **(전보)** 경채자 유사직위 전보시 필수보직기간 단축 재량 부여(4~5년 → 2년) 등
- ▶ **(보수)** 의사 등 임기제 신규채용시 연봉 자율 책정 범위 확대(인사특례)
- ▶ **(기타)** 고공단 전담 직무대리 인사처 협의 완화, 고공단후보자요건 간소화 등

- 정부혁신 취지에 따라 민첩하고 유연한 인사운영을 위한 다양한 개선 필요사항을 추가 발굴*하여 「제2차 인사자율성 종합계획」 수립

* 각 부처에서 '적시 인사'를 체감할 수 있는 과제 발굴에 초점

※ (~'23.4월) 수요조사 및 검토 → (~'23.6월) 제2차 종합계획 수립 → (~'23.12월) 법령 개정

〈 제2차 인사자율성 과제발굴 주요 분야(예시) 〉

- ① 각 부처의 유연한 적재적소 인사를 저해하는 규정
- ② 인사 관계 법규(법령 및 예규 등) 기준을 완화폐지하거나 각 부처로 위임이 필요한 사항
- ③ 인사혁신처 승인·협의를 비롯하여 절차 간소화가 필요한 규정
- ④ 실제 운영과 인사 법규 간에 차이가 있는 사항
- ⑤ 각 공무원에게 불합리하게 차별적으로 적용될 우려가 있는 규정
- ⑥ 각 부처의 원활한 인사 운영을 위해 보완되어야 할 규정
- ⑦ 인사혁신처에서 직접 집행하는 인사 운영 사항(공채, 각종 심사 등) 관련 개선 요청 사항
- ⑧ 기관 규모, 인적 구성, 업무 등 부처 특수성으로 인해 특례가 필요한 사항
- ⑨ 기타 개선 필요사항

- 인사 관련 위원회 중 적시 인사를 저해하는 유사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미운영·형식적 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전면 정비*

※ (~'23.6월) 위원회 세부 정비계획 수립 → (~'23.12월) 법령·지침·규칙 등 개정

7 사회문제를 예견하고 대비합니다.

◆ 국민 생명·안전 위협요인 예측·대응 / 위기상황 조기 발견 및 신속 전파

□ 국민의 생명·안전 위협요인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

- **(위험예측)** 공공·민간 데이터를 분석·활용하여 위험을 예측하고, 피해 발생 전에 관계기관에 예보하여 신속한 대응 지원
 - 분산된 재난안전데이터(198개 시스템)를 재난유형별(57종)로 분류하여 통합DB* 구축 및 데이터 분석·위험예측 서비스 개발
 - * 재난안전데이터를 주요 인프라를 관리하는 기관에 Open API로 공유
 - ※ (~'23.12월) 철도공사, 경찰청 등 12개 기관 42개 시스템의 데이터 수입·연계
 - 인공지능 기반의 '위험예측시스템*'을 통해 데이터 수집·분석으로 복잡·다양한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 위협요인 유입을 예측·차단
 - * 식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이터 수집분석, 변수 발굴 등으로 예측 정확성 제고
 - ※ ('23.3월~) 시스템 개발 추진 → ('23.9월~) 통관단계 우선 적용 → ('25년~) 안전관리 전체단계
 - 국민 생명·안전 관련 민원데이터와 실시간 뉴스 등을 수집·분석하여 재난피해 발생 전에 관계기관에 예보*
 - * 공공·민간데이터 융복합하여 국민안전 이슈를 자동 도출하는 '안전예보 모델' 적용
 - ※ ('23.2월~) 재난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및 예보 실시
- **(선제적 대응)** 폭우·산사태 등의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 예측정보를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대응
 - '도시침수지도*'를 제작하여 폭우로 인한 침수대비에 활용
 - * 빗물처리시설이 담당하기 힘들 정도로 폭우가 발생했을 때, 시설의 용량 초과 및 고장 시 피해가 예상되는 가상의 침수범위와 침수 깊이를 나타낸 지도
 - ※ ('23.6월~) 금강·영산강·섬진강 권역 제작 착수 → (~'23.12월) 한강 권역 제작 완료

- 산사태 위험도를 산림유역 단위로 세분화하여 제공하고,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및 사방댐 등 피해 예방사업 실시
 - ※ ('23.6월~) 유역단위 산사태 위험도 제공 및 사방댐 500개소 구축
- 자연재해정보와 공간통계정보를 융합하고, 피해예상지역의 통계를 생산·제공하여 대응기관의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
 - ※ (~'23.6월) 통계청·기상청 등 협업체계 구축 → ('23.6월~) 서비스 개발 → ('24.3월) 서비스 개시
- 기관별 해양 감시정보를 통합·활용하여 위협상황에 선제적 대응
 - * 사고선박·조난자 위치 신속 감지, 선제적 방제로 유류 피해 및 확산 최소화 등
 - ※ (~'23.6월) 해수부·경찰청 등 해양정보 연계·통합 추진 → (~'23.12월) 「해양경비법」 개정

□ 모니터링으로 위기상황 조기 발견 및 신속 전파

- **(모니터링)** 국가적 문제를 사전진단하고, 적시 대응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온라인 종합상황실'을 구축하여 신속한 대응능력 제고
 - 분야별로 흩어진 조기경보, 정책지표 등을 연계·통합하여 범정부 차원의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위기상황 조기 발견
 - * 기민한 대응이 필요한 지표들을 임계치 아래로 관리·확인하여 국정상황 이상징후 조기 발견 및 적시 대응 건인
 - ※ (~'23.10월) 온라인 종합상황실 구축 BPR/ISP 수립 → ('24년~) 온라인 종합상황실 구축 추진
- **(상황전파)** 재난·사고 등 위험상황을 국민에게 신속하게 실시간 전파
 - 사전예측이 어려운 극한의 기상현상 발생시 신속하게 재난문자를 발송하도록 기상청의 재난문자 발송 권한* 확대
 - * (기존) 지진, 지진해일, 화산 → (개선) 극단적 폭우 상황(50mm/1h 및 90mm/3h) 추가
 - ※ (~'23.5월)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개정 → ('23.6월~) 기상청 재난문자 시행
 - 도로살얼음(블랙아이스)·안개 등 도로위험기상정보 안내서비스* 제공
 - * 내비게이션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로관리기관에는 맞춤형 정보 제공
 - ※ ('23.2월~) 중부내륙선 시험서비스 개시 → ('23.12월) 서해안선 관측소 구축 및 서비스 확대

8 상호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합니다.

◆ 민관협업으로 복잡·다양한 문제 해결 / 지역현장을 중심으로 현안 해결

□ 민·관이 협업하여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

○ **(경제)** 국민과 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 지원 강화

- 고금리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사 간 대출금리·한도를 비교하여 유리한 대출 상품으로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 50여 개 금융사 시스템을 연계하여 상환 요청, 상환금액·계좌 정보 제공 등 기능 구현

※ (~'23.5월) 온라인 대환대출 이동시스템 구축 → ('23.5월) 서비스 개시

< 온라인 대환대출로 달라지는 점 >



-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파악, 현장의견을 FTA 지원정책에 반영*, 금융 지원 확대** 등을 지원하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 전국 세관, 18개 관세사회 지회·지부, 지역 수출기업 간 협업체계 구축·운영

** 관세청과 금융권 업무협약으로 대출금리 인하, 한도 우대 등 금융 지원 확대

※ ('23.3월~) 민관협의회 운영 → (~'23.6월) 관세청 등 업무협약 → ('23.10월~) 금융 지원 확대

○ **(사회)** 전문성을 갖춘 민간의 기업·전문가와 함께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안전 사각지대, 디지털 격차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

- 정부와 주민, 연구자, 사회적 기업 등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안전확보, 격차해소 등 문제를 맞춤형으로 해결*

*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 활용한 주민참여형 지역문제 해결사업 추진

※ (~'23.4월) 과제 선정 → (~'23.12월) 연구자·기업·지자체·지역주민 공동으로 과제 수행

- 휴대폰 가입, 반납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유출 방지*를 위한 유통망 관리방안 등 개선대책 마련

* 휴대폰에 저장된 데이터의 유출 방지를 위해 방통위, 이통사, 유통협회, 중고폰 업체, 소비자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 (~'23.6월) 민관협의회 운영 → (~'23.9월) 개선방안 마련

○ **(환경)** 축산악취, 해양쓰레기 등 환경문제를 주민·마을을 중심으로 해결

-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축산전문가, 농가, 주민이 소통·협업*하여 축산악취 원인 분석, 개선방안 마련 등으로 지역사회 갈등 해소

* 지자체 공무원, 축산농가, 경종농가, 지역주민(민원인), 축산환경 전문가 등 참여

※ ('23.4월) 악취개선 시급지역 30개 시·군 악취개선계획 수립 및 지역협의체 구성·운영

- 해양쓰레기의 수거·전처리·재활용·폐기 등 순환과정을 마을단위로 추진하고, 재활용 강화를 위해 업계지원* 강화

* 산단입주지원, 판매망 확보(해양관련시설 납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 (~'23.4월) 해양쓰레기 저감 혁신대책 수립

○ **(국방)** 군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이 보유한 아이디어·기술 활용

- 미래 국방의 난제에 대해 우수한 기술을 갖춘 민간이 해결방법을 기획하는 '룬샷(LoonShot) 프로젝트*' 도입·추진

* 일반적으로 실현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지거나, 전쟁, 의학, 비즈니스의 판도를 바꾸는 혁신적·도전적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프로젝트

※ (~'23.3월) 문제 발굴 → (~'23.6월) 아이디어 공모 → ('23.10월~) 룬샷 프로젝트 추진

□ 지역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지역사회 현안 해결

○ **(특화산업)** 혁신성장기반 강화를 통해 양질의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특색에 맞는 특화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

- 역량을 갖춘 지자체가 클러스터 육성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 클러스터 내 기업·인재 축적을 위해 지역대학 활성화, 지역인재 양성 등 지역 현안 반영

※ (~'23.3월) 시·도별 클러스터 육성계획 수립 → ('23.4월~) 지원사업 추진

- 대학의 유�휴부지를 창업기업 등이 입주하는 캠퍼스 혁신파크*로 조성하여 지역의 창업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

*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국토부), 산학협력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교육부·중기부) 등 연계

※ (~'23.4월) 혁신파크 추가 선정(2개 대학) → ('24.6월~) 강원대·한남대·한양대 혁신파크 운영

- **(발전기반)** 디지털 확산, 시설 확충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발전 기반 마련

- ICT 기술 기반의 '스마트빌리지'를 지역사회에 확산*하여 소득 증대, 안전강화, 생활편의 개선, 주민생활시설 디지털화 등 지원

* (파주시) AI기반 수요응답버스, (부산시) 스마트 신호운영시스템 (인천시) 스마트 주차플랫폼 등 58개 사업

※ ('23.4월~) 지자체별 예산 배정 및 사업 추진 → ('23.10월~) 지자체 대상 컨설팅·교육

- 유통·가공·판매 복합시설 및 관광단지 구축, 신규 소득원 및 부가가치 창출*, 재해 안전시설 보강 등으로 지역사회 활력 증진

* 예) 지역의 대표적인 수산물을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약 5배까지 향상 가능

※ ('23.1월~)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 → (~'23.12월) '24년도 사업대상지 60개소 선정

- **(지역정착)** 지역우수인재의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정주민구 증대

- 지역우수인재*·외국국적동포 대상으로 인구감소지역 거주, 취업·창업 등의 조건으로 거주(F-2) 또는 재외동포(F-4) 비자 우선 발급

*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의 장은 지역 특성과 수요를 고려하여 외국인력이 필요한 업종·인원과 비자 요건 등을 제안하고, 우수 인재 추천

※ (~'23.10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운영 및 성과분석 → (~'23.12월) 확대 시행

- 우수 청년인력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위해 필요한 기술교육(귀어학교), 임시주거시설(귀어인의 집), 맞춤형 정보* 등 지원

* 귀어 관련 정부시책, 교육 및 수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귀어귀촌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어촌 정착 유도

※ ('23.2월~)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 추진 → (~'23.12월) 교육·시설 등 지원

◆ 국민과의 소통 활성화 / 국민의견을 분석하여 정부정책에 반영

□ 국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정부정책에 반영

- **(소통)** 국민과 정책담당자, 홍보전문가가 정책소통의 기획·실행을 함께 추진하여 정책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신뢰 향상

※ (∼'23.2월) 부처 대상 정책 공모 → (∼'23.4월) 대국민 접수 → (∼'23.9월) 정책소통 실행

〈 정책소통 역할 〉

- ▶ **(중앙부처)** 국민에게 정책의 취지, 목표 및 현재까지의 소통 현황 제시
- ▶ **(국민)** 수혜자 입장에서 정책을 홍보하는 소통안 기획 및 실행 전 과정 참여
- ▶ **(전문가)** 국민이 제안한 기획을 실행시킬 수 있게 홍보방안 자문 및 설계지원

- **(참여)** 국민이 정부의 정책과정에 쉽게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국민의 정책 참여 활성화

- 헌법상 청원권을 국민이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청원시스템 '청원24*'를 운영하고, 청원처리 현황을 분석하여 제도 개선

* 청원사항: 국민의 피해 구제, 위법·부당 행위 시정, 법령 제·개정, 제도개선 등

※ ('22.12월~) 청원24 서비스 개시 → ('23.7월) 운영현황 분석 → (∼'23.12월) 개선사항 발굴

-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적용대상을 지자체와 공공기관까지 확대

※ (∼'23.12월) 「행정절차법」 개정안 마련 → ('24년~) 개정 추진

- 기존 불채택된 국민제안을 추후에 채택하려는 경우, 신속한 제안 처리가 가능하도록 기관별 심사위원회를 생략하도록 개선

※ ('23.4월) 개정계획 수립 → (∼'23.7월)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 ('23.8월) 차관·국무회의

- **(정책화)** 분산된 소통 창구를 연계·통합하고 민원, 제안, 청원 등 다양한 국민의견을 분석*하여 정책·제도 개선에 반영

* 국민불편 해소, 규제 개혁, 일자리·주거 문제 해결 등 민생 중심으로 과제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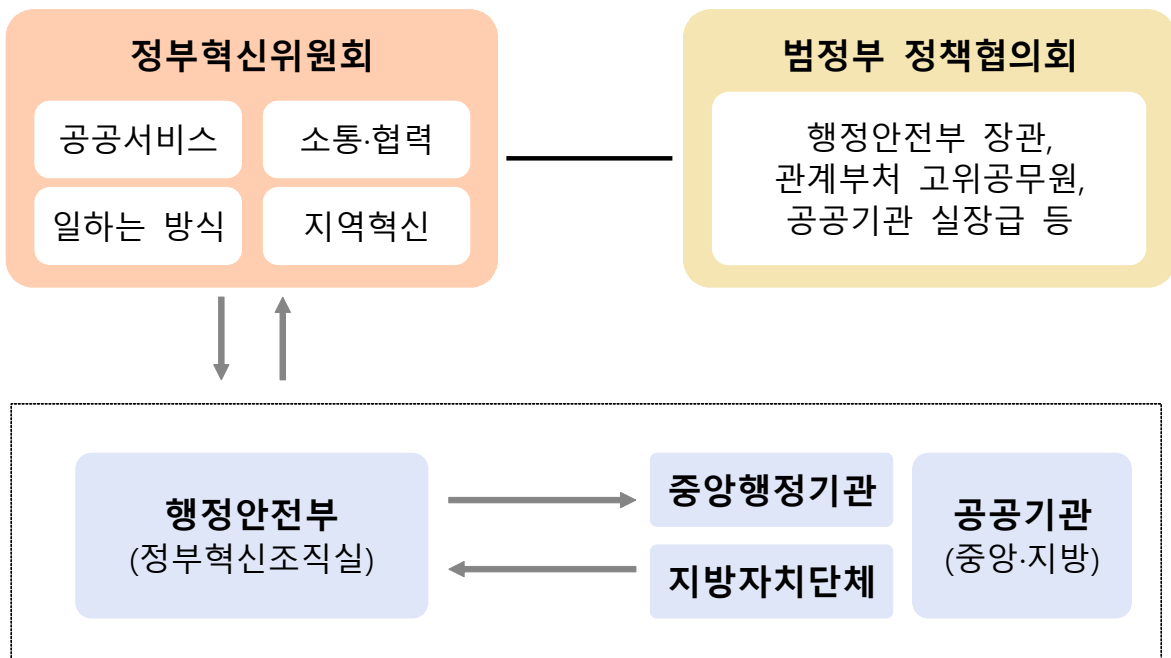
※ ('22.6월~) 국민의견 분석 및 정책화 과제 발굴 → (∼'23.11월) 국민제안시스템 고도화

IV. 추진체계 및 성과관리

□ 범정부 혁신 추진체계 운영

- (정부혁신위원회) 학계·현장 전문가가 참여하여 정부혁신 추진방향 설정, 중점과제 추진상황 점검, 주요과제 자문 대응 등 수행
 - 위원회 내 소위원회*를 운영하여 주요 과제별 추진과정에서 발견되는 이슈에 대해 수시로 논의**하고, 신속하게 조정하여 해결
 - * 공공서비스, 소통·협력, 일하는 방식, 지역혁신 등 4개 소위원회
 - ** SNS 커뮤니티를 개설·운영하여 행정안전부 및 관계기관이 주요 과제와 관련된 쟁점·애로사항 등을 공유하면, 관련 소위원회가 논의하여 개선방안 등 의견 제시
 - (정책협의회) '원팀'으로 빠르게 현안을 해결하고,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논의하며, 혁신위 활동을 범정부적으로 지원
- ※ 행정안전부장관이 주재하고, 관계부처 고위공무원과 공공기관 실장급 참석

< 정부혁신 추진체계 >



□ 국민과 소통하면서 지속적인 성과관리 추진

- (소통·피드백) 정부혁신 계획·과제·성과를 국민참여플랫폼에 공개하고, 국민 의견은 소관기관과 혁신위가 검토하여 정책과정에 피드백
 - ※ '온국민소통'의 정책제안, 정책참여 등으로 국민에게 과제를 제안받아 검토 후 추진
- (컨설팅·평가) 혁신위와 연계하여 과제별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혁신평가로 범정부적 혁신성과 제고
 - ※ 기관별 혁신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혁신 유형별 교육 병행

□ 우수한 혁신성과를 국내·외로 확산

- (범정부 확산) 정부혁신 전략회의*,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정부혁신 박람회 등으로 중앙·지방·공공기관에 혁신성과 공유
 - * 정부혁신 추진방향과 중점과제를 범정부적으로 공유하고, 혁신 공감대 확산
- (국제적 확산) 우리나라 주요 정부혁신 성과를 국제사회에 확산
 - 우리 행정제도와 서비스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혁신하고, 여러 국제기구*와 다양한 행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공유·확산**
 - * 국제연합(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동남아국가연합(ASEAN), 미주개발은행(IDB) 등
 - ** 외국 정부가 도입하고 정착시키기 쉽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묶어서 소개

〈 우리 정부혁신 성과의 국제적 확산 예시〉

- (주소체계) 국제표준(ISO 등)에 '한국형 주소체계'를 반영하고, 주소정보산업 모델발굴 및 지원으로 우리나라 관련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 (전자세정) 홈택스, 빅데이터시스템 등 전자세정 수출을 확대하고, 개도국이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컨설팅·홍보 등을 강화하여 수출발판 마련
- (법제정보) 개도국 정부 실정에 맞게 법령정보·입법지원 등 법제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법제 우수사례·경험·정보 등을 공유

- 우리나라의 수출기업에게 필요한 외국 정부의 행정제도, 관련기관, 관심분야 등의 정보를 축적하여 공유

V. 추진일정

1단계: 기반 마련

- 범정부 혁신 추진체계 운영 : 1월~
※ 정부혁신위원회 전체회의(1.13.) 및 토론회(2.16., 3.16.) 개최
- 정부혁신 대국민 인식조사* : 1월
* 정부혁신이 시급한 분야, 정부혁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역량 등
- 2023년 정부혁신 종합계획 수립 : 3월 중
- 2023년 정부혁신 실행계획 수립 : ~3월 말
※ 중앙·지자체·공공기관·교육기관 등이 자체적으로 실행계획 수립

2단계: 성과 창출

- 정부혁신 전략회의* 개최 : 4월 중
* 내용: 정부혁신 추진방향 보고, 애자일 정부 구현을 위한 종합 토론 등
- 과제별 맞춤형 정부혁신 컨설팅 : 4월~
- 정부혁신 평가 : 12월~

3단계: 확산·내재화

-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 11월~
- 정부혁신 박람회 : 11월~
- 정부혁신 우수사례 해외 수출 : 계속
- 정부혁신 우수사례 발굴·축적·홍보 : 계속

참고1

과제별 소관부처 및 추진일정 (안)

모두가 편한 서비스 정부

1. 국민 일상이 편해집니다.

① 유니버설 디자인 전면 적용	행안부·문체부	'23. 4월~
② 국가신분증 제도 개선	행안부	'23. 4월~
③ 디지털 영사민원서비스 구현	외교부	'24. 1월~
④ 장애인 건강지원 강화	복지부	~'23. 6월~
⑤ 영유아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질병청	'23. 3월~
⑥ 결식우려아동 지원 강화	과기정통부	'23. 9월~
⑦ 소아·청소년 희귀질환 진단지원 확대	질병청	'23. 4월~
⑧ 독거노인 주거시설 화재예방	소방청	'23. 5월~
⑨ 휴대폰 모바일 신고	관세청	'23. 7월~
⑩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국세청	'23. 9월~
⑪ 보훈심사 신속처리	보훈처	'23. 6월~
⑫ 신속한 병역판정	병무청	'23. 1월~
⑬ 민원 간소화	행안부	'23. 3월~
⑭ 영유아·초등 돌봄서비스 연계	교육부·복지부·여가부	'24. 1월~
⑮ 고용서비스 통합 제공	고용부	'24. 1월~
⑯ 원스톱 행정심판 구현	권익위	~'25.12월
⑰ 개인정보보호 서비스 통합 제공	개인정보위	~'23. 3월
⑱ 사용자 중심 홈택스 개편	국세청	'23. 1월~
⑲ 법령정보 서비스 개선	법제처	'23. 1월~

2. 기업 경제활동이 쉬워집니다.

①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농식품부	~'25.12월
② 지원사업 맞춤형 추천	중기부	~'23. 6월
③ 기업 무역금융 지원	관세청	'23. 4월~
④ 수입신고서류 자동심사	식약처	~'25.12월
⑤ 신약 신속심사 지원	식약처	'23. 1월~
⑥ 특허심판 절차 디지털화	특허청	'24. 1월~
⑦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구축	농식품부	'23.12월~

⑧ 신규 제품·서비스 개발 지원	산업부	~'23.12월
⑨ 입체주소체계 도입	행안부	~'23.12월
⑩ 정밀 위치정보 제공	국토부	'23. 6월~
⑪ 방위산업 수출 활성화	방사청	'23. 3월~
⑫ 소방산업 해외판로개척 지원	소방청	'23. 1월~
⑬ 신산업 기술제품 공공판로 지원	조달청	'23. 2월~

3. 사회 안전을 든든히 지킵니다.

① 방역 통합관리	질병청	~'23.12월
② 방사능 감시·관리 강화	해수부	~'23.12월
③ 식품안전관리 강화	식약처	~'23.12월
④ 의약품 공급관리 강화	식약처	~'25.12월
⑤ 폐기물 처리관리 강화	환경부	~'24.10월
⑥ 교통안전 첨단인프라 구축·확산	경찰청	~'23.12월
⑦ 해상교통안전망 구축	해경청	~'23.12월
⑧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확산	소방청·경찰청	'23. 1월~
⑨ 스마트 CCTV 구축	소방청	~'23.12월
⑩ 재난관리자원 공급체계 개선	행안부	~'23.12월

데이터 기반의 애자일 정부

4. 과학적 근거로 정책의 질을 높입니다.

① 국세데이터 개방·활용 지원	국세청	~'23.12월
② 조달통계 기반 예측·추천 서비스 제공	조달청	~'24. 6월
③ 산림공간 디지털 플랫폼 구축·운영	산림청	'23.11월~
④ 기상기후 데이터허브 구축·운영	기상청	~'23.12월
⑤ 해양공간데이터 개방·활용 지원	해경청	~'23.12월
⑥ 범정부적 데이터 분석 지원	행안부	'23. 3월~
⑦ 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운영	행안부	'23. 3월~

5. 유연하고 민첩하게 일합니다.

① 범정부 조직진단	행안부	'23. 3월~
② 통합활용정원 운영	행안부	'23. 4월~

③ 조직운영 특례 시범 시행	행안부	~'23.12월
④ 조직 자율성 확대	행안부	'23. 3월~
⑤ 위원회 폐지·통합	행안부	~'23.12월
⑥ 공공기관 혁신	기재부·행안부	~'23.12월
⑦ 신속한 법제지원	법제처	'23. 3월~
⑧ 전자문서 결재 간소화	행안부	~'23.12월
⑨ 법령 업무 자동화	법제처	'23. 2월~
⑩ 계약 프로세스 간소화·자동화	조달청	~'23.12월
⑪ 효율적 업무환경 구현	행안부	~'24.12월
⑫ 원격근무 개선	인사처	'23. 1월~
⑬ 연가·유연근무 자기결재	인사처	'23. 1월~
⑭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	고용부	~'23. 6월
⑮ 전세사기 피해예방	국토부	~'23. 7월
⑯ 마약 밀반입 차단	해경청	'23. 3월~
⑰ 탄소감축 강화 지원	환경부	'23. 1월~

6. 성과 중심의 공직문화를 구현합니다.

① 자율책정 연봉상한 폐지	인사처	~'24. 1월
② 중요직무급 보상 강화	인사처	~'24. 1월
③ 성과평가체계 개선	인사처	'23. 1월~
④ 장기성과급 신설	인사처	~'24. 1월
⑤ 특별승급 요건 완화	인사처	~'24. 1월
⑥ 속진임용 시행	인사처	'23. 4월~
⑦ 인사자율성 강화	인사처	~'23. 6월
⑧ 인사 관련 위원회 정비	인사처	~'23.12월

소통·협력하는 선제적 정부

7. 사회문제를 예견하고 대비합니다.

① 재난안전데이터로 재난위험 예측	행안부	~'24.12월
② 수입식품 위험요인 예측·차단	식약처	'23. 3월~
③ 민원데이터 분석 및 예보	권익위	'23. 2월~
④ 도시침수지도 제작·활용	환경부	~'23.12월

⑤ 산사태 예측정보 활용	산림청	'23. 6월~
⑥ 재해 피해예상지역 통계 생산·활용	통계청	~'24. 3월
⑦ 해양감시체계 강화	해경청	~'23. 6월
⑧ 온라인 종합상황실 구축	행안부	'24. 1월~
⑨ 재난문자 신속전파	기상청	'23. 6월~
⑩ 도로위험기상정보 제공	기상청	~'23.12월

8. 상호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합니다.

①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 제공	금융위	'23. 5월~
②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관세청	'23.10월~
③ 디지털·과학기술 기반 지역문제 해결	행안부	~'23.12월
④ 휴대폰 데이터 유출방지	방통위	~'23. 9월
⑤ 축산환경 개선	농식품부	'23. 4월~
⑥ 해양쓰레기 저감	해수부	~'23. 6월
⑦ 룬샷 프로젝트 운영	방사청	'23.10월~
⑧ 지역주도 클러스터 육성	산업부	'23. 4월~
⑨ 캠퍼스 혁신파크 운영	교육부·국토부·중기부	'24. 6월~
⑩ 스마트빌리지 확산	과기정통부	'23.10월~
⑪ 어촌활력증진 추진	해수부	'23. 1월~
⑫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법무부	~'23.12월
⑬ 어촌 정착 지원	해수부	~'23.12월

9. 국민과 소통하며 정책을 만듭니다.

① 대국민 정책소통 강화	문체부	~'23. 9월
② 온라인 청원 운영·개선	행안부	~'23.12월
③ 공모전 제도 근거 마련	행안부	~'23.12월
④ 신속한 제안처리를 위한 제도 개선	행안부	~'23. 8월
⑤ 국민의견 분석 및 정책화	권익위	~'23.11월

참고2

역대 정부혁신 추진내용 및 추진체계

구분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추진 배경	- 인터넷, 직접 참여 요구, 탈권위 필요 - 북유럽식 국가 운영시스템에 대한 관심증가	- 시장권력의 성장으로 정부-시장 관계에 대한 재검토 - 탈이데올로기 경향	- 정보통신기술 발달 - 탈추격기의 정부경쟁력 제고 필요	- 국가 공공성 추락 - 정책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광장민주주의 현상	- 감염병 확산,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정책환경 변화 - 국민소통 기반 추진체계 개편
핵심 가치	투명·분권·성과	개방·자율·창의	개방·공유·소통·협력	참여·협력·신뢰	투명성·공정성·효율성
비전	국민과 함께하는 일 잘하는 정부	섬기는 정부	신뢰받는 정부, 국민행복 국가	국민주권 정부의 실현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
목표	5대 목표	-	4대 핵심가치	3대 목표	2대 목표
전략 과제	6대 분야 149개 과제	4대 전략 20개 과제	3대 전략 10개 과제	3대 전략 10개 과제	3대 전략 8대 중점과제
주요 특징	- 효율·봉사·투명·분권·참여 중심 - 정부 내부 프로세스 및 인프라 구축 중점	- 실용성을 중심으로 정부기능 효율화 - 민간의 자율적 역량 중시	4대 가치(개방·공유·소통·협력) 중심 - 정부 서비스 제공에 중점	- 참여와 협력을 통한 공공성 회복 중점 - 공공성·참여·협력을 중시 - 자발적·자율적 혁신	- 국민생활에 직결된 문제 신속해결 중점 - 국민과 투명한 소통 강조 - 국민체감형 범정부 혁신
추진 체계	- 정부혁신추진회의 (대통령 주관)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대통령 소속) - 행정개혁, 인사개혁, 지방분권, 재정세제, 전자정부, 혁신관리, 기록관리 전문위원회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대통령 소속) - 규제개혁, 법제도 선진화 등 분야별 정부혁신 추진	- 정부3.0 추진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6개 위원회: 기획총괄, 클라우드, 협업·공유, 빅데이터, 개방, 맞춤형 서비스	- 정부혁신추진협의회 (행안부장관 소속) 3개 분과: 서비스, 일하는 방식, 참여·협력	- 정부혁신위원회 4개 소위원회: 공공서비스, 소통·협력, 일하는 방식, 지역혁신 ※ 중앙부처·공공기관 참여하는 범정부 정책협의회 운영

□ OECD '정부신뢰도'

- (개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매년 회원국의 정부신뢰도를 조사하고 격년 주기로 조사결과를 공식 발표

* '귀하 나라의 정부를 신뢰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긍정/부정 답변 비율로 측정
 ※ World Gallup poll에 조사의뢰하여 국가별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

- (평가) 2021년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정부신뢰도는 45%(조사대상 37개국 중 20위)로 2017년 이후 3차례 연속 상승세(2007년 조사 이후 최고 수치)
 ※ (역대 한국 정부신뢰도) 2015년 34%(26위), 2017년 24%(32위), 2019년 39%(22위), 2021년 45%(20위)

□ 세계은행 세계거버넌스지수 '정부효율성'

- (개요) 세계거버넌스지수(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는 세계은행이 약 200개 국가의 제도 수준을 정량화하기 위해 1996년 개발한 지수
 - 세계거버넌스지수는 ① 여론과 책무성, ② 정치적 안전성, ③ 정부 효율성, ④ 규제 질, ⑤ 법치주의, ⑥ 부패 통제 등 총 6개 분야 평가
 - 6대 지표 중 정부 효율성 지표가 정부혁신 분야와 관련성이 높음

< 정부효율성 지표 주요내용 >

- (산정내용) 공공서비스의 질, 공무원의 역량, 정치적 압박으로부터의 독립성, 정책 수립과 이행의 질, 정부의 정책 이행에 대한 신뢰
- (산정방식)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 민주주의 지수, 세계경제포럼 세계경쟁력 보고서 등 정부효율성과 관련된 외부지표를 사용해 종합적으로 산정

- (평가) 최근 4년간 정부 효율성은 지속적으로 상승 중

< 3년간 6대 지표별 순위 추이 > ※ 순위(전체국가 수)로 표기

연도	여론과 책무성	정치적 안전성	정부 효율성	규제 질	법치주의	부패 통제
2022	47(208)	70(213)	20(209)	35(209)	33(209)	48(209)
2021	59(208)	80(213)	22(209)	40(209)	33(209)	51(209)
2020	61(208)	78(213)	24(209)	38(209)	30(209)	50(209)
2019	56(208)	74(213)	35(209)	37(209)	30(209)	59(209)